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0
----------	-----

발의연월일 : 2025. 1. 24.

발 의 자 :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1. 제안 이유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의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양육의 균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조례 적용범위(안 제4조)
- 다.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양주시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와 이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말한다.
2. “초등학생 학부모”(이하 “초등학부모”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입양 포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를 말한다.
3. “등·하교 도움시간”이란 초등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소요하는 등·하교 각각 1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

람에게 적용한다.

1. 남양주시가 지정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직자
2. 자녀가 남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양주시 거주 학부모

② 이 조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지원사업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초등학부모 근로자 현황 및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부모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상한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초등학교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① 시장은 고용주가 초등학교부모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을 통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 내 사업장의 고용주는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
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부모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를 단축할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

- 우리시는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개월간 월 30만원씩 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
-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착한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의미있는 지원임.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들의 돌봄 해소로 가족친화적인 직장이 되고, 학부모들은 육아에 큰 도움을 받아 고용확대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 우리시 초등학생 수는 24년 5월 기준 41,262명이고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음.
- 국민연금에 가입된 우리시 전체 취업인원수(직장인 수) 186,559명 중 관내에 직장소재지가 있는 직장인 수는 61,341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시 직장인 중 2/3 인원이 관외로 출·퇴근하고, 학생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100건 계획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6천만원임.

※ 산출식(60,000천원 = 300천원 × 2개월 × 100명)

4. 작성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